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VKC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VISIT KOREA COMMITTEE

RIDE THE KOREAN WAVE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FIS 01 한국재정정보원 www.fis.kr
(04637)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908-8200 Fax 02-6312-8959 www.fis.kr

9 772508 897000 03
ISSN 2508-8971

월간 나라재정

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3

재정 INSIGHT
통계로 보는 SOC 예산
재정 칼럼

재정 NOW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해외재정동향

재정 STORY
현실 속 재정제도 이야기
재정, 그땐 그랬지



2024 March
Vol.87

FIS 한국재정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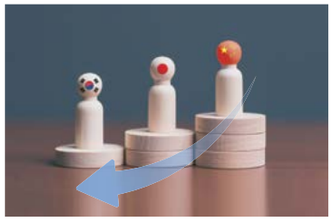
발행등록번호 FIS



CONTENTS







재정 INSIGHT

04 통계로 보는 SOC 예산

08 재정 칼럼

경제활성화와 SOC 예산
-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SOC 투자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방안
- 고길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국토 관리:
노후화된 인프라 관리 문제 해결
- 어명소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22 정책연구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리·활용 방안
- 박정수 재정정보분석센터 부연구위원

재정 NOW

26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28 해외재정동향

주요국 및 국제기구 재정동향

재정 STORY

36 현실 속 재정제도 이야기

절대왕정의 재정학: 관방주의
- 옥동석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44 재정, 그땐 그랬지

인구감소 시대
미래 한국경제의 모델 국가
- 배국환 전)기획재정부 제2차관

48 일상 속 경제·재정 이야기

인플루언서 매칭 플랫폼과 디토소비
- 조원경 UNIST 교수

52 문화로 보는 재정 이야기

54 재정 캘린더

56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58 애독자 코너

월간 나라재정
2024 MARCH VOL.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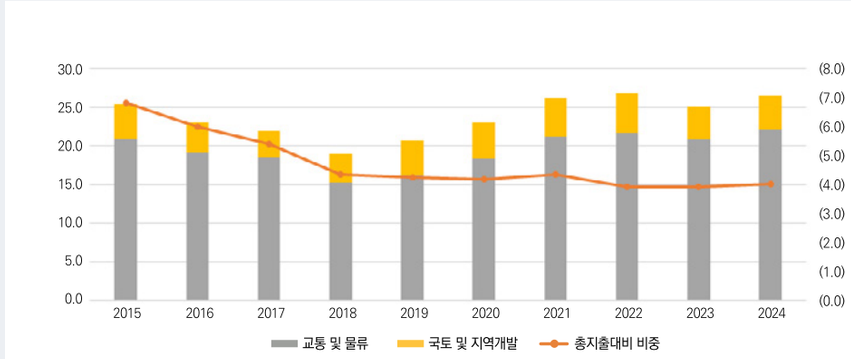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fis.kr
발행인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센터 | 02-6908-8559

통계로 보는 SOC 예산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은 항만, 도로, 철도, 전기 가스 등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일컫는다. '사회(Social)'란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며, '간접(Overhead)'은 특별한 어느 한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고, 사회 전반적인 생산에 이용된다는 의미이다. 사회간접자본은 국민들의 일상에서 기반이 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를 직·간접적으로 받는다.[1)]

〈최근 10년간 SOC 분야 예산 추이〉

(단위: 조원,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SOC (총지출 대비 비중)	25.4 (6.8)	23.0 (6.0)	21.9 (5.4)	18.9 (4.4)	20.6 (4.3)	23.0 (4.2)	26.2 (4.4)	26.8 (3.9)	25.0 (3.9)	26.4 (4.0)
교통 및 물류	20.9	19.1	18.5	15.3	16.3	18.3	21.1	21.7	20.8	22.1
국토 및 지역개발	4.5	4.0	3.5	3.7	4.4	4.8	5.1	5.1	4.2	4.4

자료: 열린재정, 예·결산 데이터

* '22년까지는 결산 '23년부터는 본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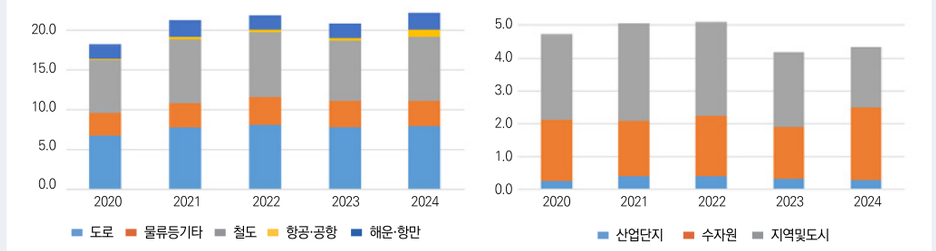
1)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이에 정부는 예산의 일정부분을 SOC의 생산 및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하고 있다. SOC 분야 예산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0.44% 증가했다. 2015년 25.4조원이였던 예산은 2017년 21.9조원, 2018년 18.9조원으로 감소하다 2019년부터는 조금씩 증가해 2024년 SOC 예산은 26.4조원이다. 2024년 SOC 예산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이는 2015년 6.8%, 2019년 4.3%, 2022년 3.9%로 감소했다가 다시 소폭 증가한 수치이다.

SOC 예산은 교통 및 물류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구성된다. 교통 및 물류 예산의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20.9조원에서 2018년 15.3조원으로 예산이 감소했다가 2021년부터 점차 증가하여 2024년에는 22.1조원으로 편성됐다.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도 교통 및 물류와 비슷하게 2015년 4.5조원에서 2018년 3.7조원으로 감소했다가 2024년 4.4조원 수준을 회복했다.

〈교통 및 물류와 국토 및 지역개발 추이〉

(단위: 조원)



	2020	2021	2022	2023	2024
도로	6.8	7.7	8.1	7.8	8.0
물류 등 기타	2.8	3.1	3.6	3.2	3.1
철도	6.5	8.0	8.0	7.6	8.1
항공·공항	0.2	0.3	0.3	0.3	0.9
해운·항만	1.9	2.0	1.7	1.9	2.0

	2020	2021	2022	2023	2024
산업단지	0.3	0.4	0.4	0.3	0.3
수자원	1.8	1.7	1.9	1.6	2.2
지역 및 도시	2.6	3.0	2.8	2.3	1.9

자료: 열린재정, 예·결산 데이터

* '22년까지는 결산 '23년부터는 본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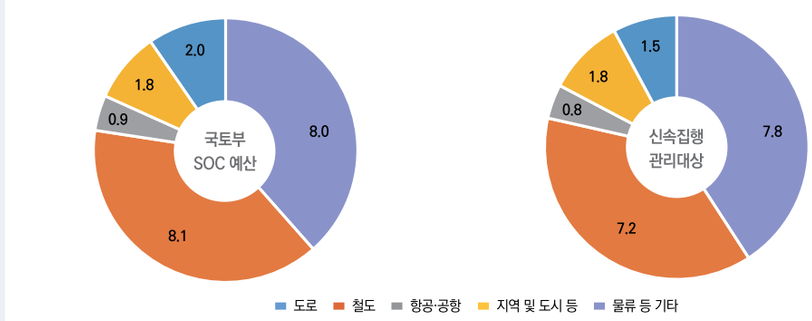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의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도로와 철도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도로 부문의 비중은 2020년 37.3%(6.8조원)에서 2024년 36.1%(8.0조원)로 감소했다. 철도 부문은 2015년 35.7%(6.5조원)에서 2024년은 36.7%(8.1조원)로 비중이 증가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20년 지역 및 도시 부문이 55.5%(2.6조원)로 산업단지, 수자원 부문보다 비중이 컸다. 그런데 2024년에는 비중이 역전되어 수자원 부분이 50.5%(2.2조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지역 및 도시 분야는 42.5%(1.9조원)로 2015년 대비 비중이 줄어들었다.

정부는 지난 1월 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집행(조기집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재정 신속집행은 정부가 예산 확정 후 당초 계획된 재정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해 민간시장의 자금을 조기에 공급하고 공급된 자금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정책을 말한다.[2)]

〈2024년 국토부 SOC 예산과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

(단위: 조원)



	도로	철도	항공·공항	지역 및 도시 등	물류 등 기타
국토부 SOC 예산	8.0	8.1	0.9	1.8	2.0
신속집행 관리대상	7.8	7.2	0.8	1.8	1.5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SOC 사업 신속집행 계획

2)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계획을 통해 SOC 분야 신속집행을 추진하여,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한다. SOC 예산 중 가장 큰 비중(78.6%)을 차지하는 국토교통부의 SOC 예산을 중심으로 추진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기반 시설 사업을 집행한다. 이를 위해, 신속집행 관리대상을 19.9조원의 규모로 선정했는데, 이는 국토부 SOC 예산 20.8조원 중 인건비 등과 같이 균등집행이 필요하거나 경제활성화와 관련이 없는 이차보조금 등과 같은 일부 비목을 제외한 수치이다. 상반기에는 이 중 65.0%인 12.4조의 신속집행을 추진하는데, 이는 2020년 59.2%, 2021년 60.0%, 2023년 61.2%보다 높은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도로 7.8조원 중 5.3조원(67.5%)을 철도 7.2조원 중 4.6조원(63.9%)을 조기집행한다. 항공·공항, 지역 및 도시, 물류 등 기타도 각각 0.5조원(60.3%), 1.1조원(61.3%), 0.9조원(64.1%)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제활성화와 SOC 예산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SOC 투자와 경제활성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교통시설과 수자원, 산업단지 조성, 물류기반 확충 등과 관련된 SOC(Social Overhead Capital)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 결과 축적된 사회간접자본 스톡은 우리 경제성장의 주요한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이는 또한 국민의 삶의 질에 직결될 수 있는, 정부로서는 아주 중요한 공공 투자사업 중 하나이다. 개별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수익성을 중시하는 시장의 원리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세금과 같은 공공의 재원으로 공익에 부합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맡겨 놓으면 원하는 만큼 공급이 되지 않아 경제 활동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논하는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진 것처럼 실제 정부의 공공 투자사업과 그 결과 축적된 사회간접자본의 존재는 한국 경제성장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경제위기가 다가올 때, 그리고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을 때 정부가 잘 사용하는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한 예로 1990년대 초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인해 생긴 과다한 물류비용 해소와 경기 부양을 위해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막대한 규모의 토목사업,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펼친 대규모 인프라 공공사업을 들 수 있다. 또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막대한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대규모 공공 투자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진행된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경기를 살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공공 투자사업들은 경제살리기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본래 의도했던 사업의 효과성도 문제가 될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의 낭비적 요소로도 작용하기도 한다. 과거 4대강 정비사업, 무분별한 지방공항 건설, 대규모 메가이벤트 유치 관련 인프라 사업 등은 이에 대한 좋은 예이다. SOC는 국민들의 기초생활 및 기업의 경제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공공재이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투자되고 있지 않다면 이는 현실적으로 재점검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상의 점들을 염두에 두고 2024년 예산과 2023~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SOC 예산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2024년 예산과 2023~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SOC 투자

SOC 예산은 2024년 26.4조원으로 총지출 656.6조원 대비 4.0%의 비중이며 작년대비 5.8% 증가하여 2024년 총지출 증가율인 2.8%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23~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의 SOC 증가율은 2.9%로 총지출 증가율 3.6%보다는 다소 낮은 증가율로 배분되었다. 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6.6% 증가해 온 SOC 투자를 조정해 온 결과로 보여진다.

당초 2024년 예산안에서 SOC 투자 중 부문간 배분은 도로부문에 7.8조원, 철도부문에 8조원, 항만수자원 부문에 4.3조원, 지역 및 도시부문에 1.8조원, 그리고 물류/항공/산단 등에 4.1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SOC 분야는 교통인프라 적기개통 및 안전투자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등 편리하고 혁신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강조점이 두어졌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유지보수 및 근로자 작업안전 확보 지원을 위한 투자를 강조하였다. 한편,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K-Pass를 도입하는 것이나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지원 등도 눈여겨 볼 만하다.

〈표 1〉 2024년 SOC 재정투자 현황(예산안 기준)

(단위:억원)

구 분	'23	'24	비 고
• 도로부문	78,408	78,705	• 건설(5.2 → 5.1조원) • 안정 등(2.0 → 2.3조원)
• 철도부문	75,968	80,501	• 건설(4.3 → 4.2조원) • 안정 등(2.1 → 2.5조원)
• 항만수자원부문	34,562	42,490	• 건설(1.5 → 1.6조원)
• 역 및 도시부문	22,631	18,253	•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신규 (135억원)
• 물류·항공·산단 등	38,311	41,400	• 항공·공항(0.3 → 0.8조원)
합 계	249,881	261,349	전년대비 +4.6% *확정예산 기준 +5.8%

자료: 2024년 예산안, 기획재정부자료

2023~27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SOC 투자에 대한 평가와 정책 진단은 다음과 같다. 그간 정부는 산업 활동 지원 및 국가 교통기간망 구축을 위해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 공급 위주의 투자를 지속해왔다. 그 결과 양적 측면에서는 도로·철도 연장이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향후 투자방향은 신규 건설투자에서 벗어나, 기존 시설에 대한 안전강화, 효율적 관리 등 SOC의 질 관리 강화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노후 SOC 등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교통세 및 교통특별회계 도입 이후 SOC 시설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40~50년 전에 건설된 기반시설의 경우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재정소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과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역시 필요하다. 한국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동시에 수도권 성장집중으로 지역별 격차는 심각한 상태이다. 향후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그동안 발전이 늦었던 지역이 SOC 투자에서 더욱 불리해지고, 지역간 격차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투자 역시 필요한데 초광역권 경제기반 도시 조성, 지역 주민 교통편의 제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로/철도 신규 사업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지역 SOC 투자사업이다.

또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SOC 투자사업 역시 필요하다. 가령,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투자, 자율주행차량 상용화를 위한 도로 인프라 확충, 스마트시티 확충을 통해 교통, 범죄예방, 헬스케어, 쓰레기 처리 등 기존 도시문제 해결 등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표 2〉 2023~27년 중기 SOC 분야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SOC 분야	249,881	261,349	261,649	272,701	280,456	2.9%
• 교통 및 물류	208,207	217,725	216,950	226,614	235,190	3.1%
▪ 도로	78,408	78,705	71,872	74,392	78,715	0.1%
▪ 철도·도시철도	75,968	80,501	74,158	77,958	79,369	1.1%
▪ 해운·항만	18,880	20,117	19,530	20,717	21,090	2.8%
▪ 항공·공항	3,435	8,425	20,806	24,542	27,809	68.7%
▪ 물류 등 기타	31,515	29,977	30,585	29,004	28,207	-2.7%
• 지역개발	41,674	43,624	44,699	46,087	45,266	2.1%
▪ 수자원	15,682	22,391	22,187	22,125	21,709	8.5%
▪ 지역 및 도시	22,631	18,253	19,057	20,712	20,172	-2.8%
▪ 산업단지	3,361	2,980	3,455	3,250	3,386	0.2%

자료: 2023~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기획재정부.

SOC 경제활성화 투자와 정책적 이슈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대부분 다년간의 공사 기간과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낭비적 요소가 발견되거나 경제성이 떨어진다면 그 심각성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이 있다.

첫째,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경제 성장과 위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항상 그런가하는 점이다. 어느 정도 수준의 투자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너무 많아도 또 너무 작아도 문제가 될 것이다.

둘째, 각종의 선거 국면에서(지방선거, 총선, 대선 등)에서는 작게는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교량·도로 건설, 낙후 지역 개발 등을 위해서, 크게는 올림픽이나 엑스포 등과 같은 메가이벤트성 사업 등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 발전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유효성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으로 5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국책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과 정책 효과 등을 비롯한 종합적 타당성 검증을 거쳐 실시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지만 최근 들어 이를 무력화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효과적인 SOC 재정투자를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SOC 투자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방안

고길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은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로 주로 교통, 통신, 에너지, 수자원 및 학교, 병원 공공주택과 같은 공공시설을 지칭한다. 최근에는 생활형 간접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포함시켜 문화 및 여가, 안전, 사회복지와 관련된 각종 시설까지도 사회간접자본의 영역에 포함하기도 한다. SOC 투자에서 정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것은 개인이나 기업이 단독으로 건설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다. SOC 투자가 시민의 삶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 이외에도 경제성장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SOC 투자예산은 매년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항상 쟁점이 되어 왔다.

SOC 투자예산에 대한 고민은 역사적 맥락 속에 존재한다. 1980년대에는 고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재정이 긴축운용 되었고, 고도 성장과정에서 발생된 지역간, 계층간, 산업 부문간의 균형과 형평이 중요해지면서 SOC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용지보상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투자비용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산업활동의 증가, 자동차 증가 등으로 인해 SOC 공급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 초반 적극적 SOC 투자를 시도하였으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매년 반복되었다. 또한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정치적 논쟁으로 인해 제대로 된 투자의사결정이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3년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이 제정되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기본 취지는 안정적인 SOC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중장기적 SOC 투자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는 해당 법에 의해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되어 분야별로 예산을 배분하도록 되어있다.

SOC 투자의 비효율적 예산배분의 첫 번째 원인은 이 교통시설특별회계와 관련되어 있다. 안정적 재원확보가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오히려 소홀히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원래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초기에 한시법처럼 운영되도록 설계되었으나, SOC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존속되고 있다. 정부 예산에서 다른 특별회계가 갖는 문제들처럼 교통시설특별회계도 재원 배분이 특정 분야에 고정되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시설특별회계라는 안정적인 재원과 예산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산 제약하 효율적 재원배분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사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1990년대 말의 아시아 금융위기 상황에서 심각하게 논의가 되었으며, 그 결과 한국에서는 SOC 투자를 효율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부처 단위에서 수행하던 사전 타당성 조사를 예산부처가 사업의 타당성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 환경이 변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재검증을 하도록 하여 사업 결정 단계에서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사업비 증가를 통제하였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건설사업 사후평가제도를 통해 원래 의도했던 SOC 투자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여 SOC 투자의 생애주기적인 관리를 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에 구축된 이러한 SOC 투자의 관리 체계는 도전을 받았고 SOC 투자의 예산 낭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둘째, 책임성의 부재이다. 먼저 예비타당성조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원래 예산부처가 문지기(gate keeper) 역할을 하면서 사업의 시급성을 부처가 입증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SOC 투자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지역균형개발, 경제활성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결국 예타

면제 사업 수가 계속 증가하여 급기야 문재인 정부에서는 149건 120조에 달했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까지도 지속되어 예타 면제사업의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비롯해 다양한 특별법이 추진되어 2023년에는 90조가 넘는 면제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19년 88.9%, 2022년 100%, 2023년 80%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이 높아졌다[1].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하면서, 사업 추진 여부의 최종 판단은 기획재정부「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전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주무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이 AHP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렸던 것과 달리, 이제 기재부가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의사결정의 책임이 기재부에 지워짐을 시사한다. 또한 특별법에 의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경우, 그러한 의사결정의 책임은 국회에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누군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는 좀처럼 없다.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다 보니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예타면제의 근거가 되었던 지역균형개발, 경제활성화가 과연 실제로 달성되었는지 그 효과 또한 누구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SOC 투자 예산배분의 비효율적인 배분의 두 번째 이유가 '책임성의 부재'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실질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학습의 부족이다. 건설사업 사후평가제도는 1999년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이후 추진된 제도로 사업수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효율성은 높은지, 파급효과는 어떠한지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사후평가는 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후평가위원회 역시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다. 결국 주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경제성도 확보되지 못하며, 오히려 운영비만 계속 부담해야 하는 사업조차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예타 면제가 된 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성은 차치하더라도 지역 균형개발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개선시켰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개통된 함안역의 경우 4천억 이상의 총사업비가 투자되었지만, 이용객이 하루에 몇십 명 밖에 되지 않아 결국 2015년 KTX 정차가 폐지되었다. 지역주민의 삶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계획 당시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마산합포구, 의령군, 고성군 주민을 모두 포함한 14만명에게 그냥 현금을 나누어준다면 각자 2.9백만원씩 줄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체계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고, 그 결과 매년 지역사업을 명목으로 예산낭비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비효율적인 SOC 투자 예산 배분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사후평가를 통한 학습의 부재'이다.

앞에서 논의한 세 가지 비효율적인 SOC 투자예산 배분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 첫째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상에 있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각종 SOC 투자사업이 계속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것은 해당 사업 추진에 따른 이익을 보는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 현실에서는 대표적으로 지역 건설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지역 정치인이 지역 건설업체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국가적 차원의 이익보다는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SOC 투자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특정 지역의 편익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사회적 편익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건설 단계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편익을 소수의 지역업체에 집중시키고 비용은 전국민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SOC 투자 재원을 보장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는 SOC 투자사업이 산업, 교육, 복지사업 등과 같이 주민의 편익과 직접 연관된 사업과 서로 경쟁해야 한다. SOC 투자에만 특별회계로 재원을 할당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 접근인지 고민해야 한다. 셋째, 책임 중심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잘못된 타당성 평가나 예타면제에 대한 책임은 주무부처, 기재부, 국회가 져야 한다. 투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넷째, 사후평가 제도를 강화하여 잘못된 정책에 대한 교훈을 얻도록 해야 한다. 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환류하여 이후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해야 한다.

국가 정책은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효율성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정책결정자가 효율성을 희생하면서도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추구한다고 주장할 때는, 그 편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비효율적인 SOC 투자 사업의 비용은 결국 다른 지역주민의 부담이 된다. 더 이상 지역주민의 이름으로 소수의 편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SOC 투자가 정말 주민의 이익에 도움되는지를 정치인과 정책결정자에게 강력히 물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가 이루어질 때 효율적인 SOC 투자 예산 배분이 시작될 것이다.

1) 정동호(2024),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p.14.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국토 관리:
노후화된 인프라 관리 문제 해결

어명소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경제 위기, 정부의 SOC 투자의 중요성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경제 위기 시 정부의 사회 투자가 경제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지출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경제 성장, 불평등 완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도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은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크게 확대하는 적극적 경기 대응 정책을 통해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성공했다. 한국 정부 역시 1970년부터 경부고속도로, 초고속 인터넷망과 같은 SOC 투자에 주력해 산업화·첨단화를 이뤘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도 SOC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회복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국가의 핵심 인프라는 변화되고 있으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접어들면서 초연결·초지능·초실감 시대를 열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노후화된 인프라 효율적 관리 중요

하지만 SOC의 지속적 구축과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 주도의 SOC 투자에 제약 조건이 많고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도 쉽지 않아 구축보다는 유지·관리에 비중을 늘려가는 추세다. 더욱이 경제 발전을 위해 공격적으로 구축했던 SOC가 노후화되고 기후위기가 본격화되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의 과학적 유지·관리가 중요해진 상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글로벌 지표로 본 한국 인프라 경쟁력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30년 기준 한국 주요 인프라 시설의 41%가 경과 연수 30년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전체 인프라의 47%가 6년 후 준공 30년이 넘는다.

〈표2〉 주요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 비중(%) 비교

구 분	2030년 기준 30년 이상 비중(단위:%))		
	수도권	비수도권	전 체
공동구	58.3	37.5	50.0
상하수도	46.7	40.3	42.3
옹벽	18.1	18.2	18.1
교량	34.3	27.7	29.3
터널	32.7	15.7	21.4
하천	48.7	41.2	43.0
댐	87.5	74.0	75.2
항만	52.6	48.2	48.9

주 : 주요 인프라 시설 중 도로, 공항 등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서 제공하지 않고 운영 주체별로 관리됨.
자료 :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출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제941호 p4)

노후화된 SOC 공간정보기술로 관리

따라서 노후화된 SOC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공간정보 기술을 접목해서 과학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공간정보란 SOC 시설의 위치, 상태, 속성 등을 표현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정보를 뜻한다.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술이 발전되면서 공간정보는 D.N.A와 융·복합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인프라로 부각된다.

공간정보기술은 SOC 시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여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3D 시각화와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최적의 설계 및 운영방안을 도출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유지보수를 최적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홍수 발생 시 침수 예상 지역을 미리 알림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스마트 주차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편리한 이동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다.

SOC 디지털화의 결정체, 디지털트윈

디지털 트윈은 가상공간에 현실의 쌍둥이를 만들고 시뮬레이션으로 확보한 데이터를 현실에 적용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실시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 발생을 예측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 디지털트윈이 더욱 주목을 받게 된 것은 5G,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등 첨단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활용도가 무궁무진해졌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로 노후화된 SOC 관리가 대두됨에 따라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SOC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비용절감, 안전성 확보, 신속한 재난재해 대응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차원 디지털 국토 위에 민간·행정 등 각종 데이터를 연결·융합해 가상공간을 구축하고 현실과의 동기화·시뮬레이션을 거쳐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전 국토를 디지털트윈으로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정밀도, 기관별로 구축된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 기반 부족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다.

LX, 디지털트윈 활용해 노후도시 정비 등 인프라 지원

LX공사는 디지털트윈 기반 LX플랫폼을 구축하여 인프라 관리를 고도화하고 다양한 국토·도시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2022년부터 본격 활용된 LX플랫폼은 3D 공간정보, 행정·민간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여 효율적 정책 결정을 지원한다. LX플랫폼은 건축물의 일조량·바람길 시뮬레이션부터 집중호우시 침수지역 예측까지 10개 행정 활용 서비스와 9개 특화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LX공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서비스 모델도 개발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노후계획도시 정비구역을 검토하고 시뮬레이션하여 도시 정비 효과를 예측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행정은 복잡한 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효율적 정책 결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쟁력 덕분에 네이버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에 디지털트윈 기반 LX플랫폼을 수출하는 낭보를 전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수출 1호 사업'으로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해외에 적극 알리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LX공사는 앞으로도 LX플랫폼의 활용 확산을 위해 디지털트윈의 고도화, 데이터 개방 확대, 국제협력 다각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트윈, 미래 도시·스마트 국토 관리의 핵심 기술

디지털 트윈은 스마트시티와 같은 미래형 도시의 기반 기술이자 스마트 국토관리를 위한 핵심 기술이다. 현실 세계와 완전히 연결되고 동기화되는 디지털트윈이 전 국토에 구축되면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하여 SOC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게 된다. 노후화된 SOC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안전성 확보, 미래 지속가능성 확보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의 노력을 통해 디지털 트윈의 발전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과제를 해결한다면, 편리하고 안전한, 지속 가능한 미래 국토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디지털 트윈국토'를 구축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선도형 국가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과정일 것이다.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리·활용 방안

박정수 재정정보분석센터 부연구위원(mymajesty@fis.or.kr)



들어가며

국고보조사업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업무를 재정상으로 보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으로 100조 원을 초과하였고, 2023년 현재 총지출의 16.0%를 점유하고 있다. 2024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16.6% 증가하고 그 중요성도 부각되는 만큼, 국고보조사업의 성과와 효과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각종 성과관리와 평가제도, 그리고 전산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 계속 사업에 대한 연장평가 등은 재정성과관리에 포함된 대표적인 국고보조사업 관리제도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의 편성, 집행, 성과관리를 위한 정보관리 체계와 시스템은 이원화되어 있어, 유기적 연계나 활용이 제약되고 있다. 현재 국고보조사업 관리를 위한 시스템 지원은 국가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인 디브레인플러스(이하 dBrain+)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이나라도움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dBrain+는 국가재정 전반의 성과관리 체계를 지원하고, 이나라도움은 내역사업 관리, 중복부정수급 관리 등 국고보조사업 전반의 관리를 지원한다. 국고보조사업 성과지표는 dBrain+에, 연장평가, 신규사업 심사를 위한 근거정보는 이나라도움에 저장되어 있으나, 연계가 되지 않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에의 정보 활용이 유기적이지 못한 한계가 있다.

국고보조사업을 신규사업 편성에서 시작해 일몰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생성, 축적되는 정보를 일관된 체계에 맞게 저장하여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해외의 국고보조 관련 제도 변화와 전산시스템의 최근 변화를 살펴보고, 국고보조금의 성과정보가 국고보조사업 편성, 집행, 결산에 이르는 전과정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리의 해외 사례

본 연구는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리 해외 사례로, 가장 최근에 보조사업 관련하여 전산 인프라를 일신한 미국,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의 보조금은 예산 편성, 사업 관리, 사업비 집행, 보조사업자 관리, 성과관리를 위한 전산지원 시스템을 당초 분산하여 구축했지만, 최근에는 이들 시스템을 통합하고, 정보 공개 역시 일원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장에서 살펴볼 미국의 사례는 보조사업자 통합관리 환경 구축(Integrated Award Management, 이하 IAE), 그리고 최근의 성과관리 현대화 일환으로 평가 관련 정보를 한곳에 집대성한 evidence.gov이다. 미국의 국고보조사업 관리 관련 전산시스템 통합은 2004년부터 시작해 무려 18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그 결과 IAE의 하위 시스템으로 조달·보조 통합시스템 SAM(System for Award Management)과 성과시스템 CPARS(Contractor Performance Assessment Reporting System)로 이원화하여 운영 중이며,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2014년 보조금 관련 지침 6개를 표준화 및 단일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통합 재정정보 공개를 위한 USASpending 외에도 성과관리 정보 공개를 위한 performance.gov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집약 공개하기 위해 2021년 evaluation.gov를 오픈하는 등, 편성-집행-성과 정보 통합관리와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 사례는 영국이다. 2007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 운영 중인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영국도 정부보조금통합정보시스템 GGIS(Government Grant Information System)를 2017년 개통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보조금 누수 관리, 부정수급 탐지 등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현재 정보공개와 정보 활용 차원으로 확

〈표〉 비교대상 3국의 보조금 관리제도와 시스템 비교

		미국		영국	대한민국	
규모[1]		8.7조 달러 (총지출 대비 61.7%)		4,164억 파운드 (총지출 대비 39.3%)	109.1조원 (총지출 대비 16.6%)	
제도	법령/ 관리지침	OMB A-11 예산안 편성준비지침 OMB Uniform Guidance on Grants		Gov't Functional Standard: Grants Guidance for Grants Grants Pipeline Control Framework	국가재정법, 국고보조금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사업목록	Assistance Listing		360giving list	이나라도움 내역사업 목록	
	평가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평가 보조사업자성과평가		성과점검, 적정성평가 심층평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조사업성과지표관리	
전산 관리	시스템	SAM	CPAR	GGIS	dBrain+	이나라도움
	개요	사업자 등록 및 관리 공모사업등록	공모사업 성과관리	내역사업 등록, 공모사업 관리	세부사업 정보 보조사업 성과지표 등 통합재정 정보 관리	내역사업 등록, 공모사업 관리
	주사용자	사업자/관리자	사업자/관리자	사업자/관리자	관리자	사업자/관리자
	공개	보조사업 목록: SAM.gov/grants.gov 재정정보: USASpending.gov 성과정보: Performance.gov 평가정보: Evalution.gov		평가정보 및 성과정보: uk.gov 보조사업 목록: 360giving	성과정보 및 평가정보: 열린재정 보조사업 목록 및 평가정보: 이나라도움	

주 1) 대한민국 2024년, 미국, 영국 2023년 예산 기준
자료: 각국 지침, 공개 홈페이지 자료 기준으로 저자 작성

대되고 있다. 시스템 개통 및 개선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지침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처음으로 일반보조금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General Grants)을 제정하였으며, 2021년 지침 개정으로 보조금 성과관리와 사후평가를 성과점검, 적정성 평가, 심층 평가 등으로 통일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보조금 평가 보고서를 uk.gov에 통합공개하고, 보조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360giving에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리 개선방향

정부재정의 양적 팽창, 성과중심의 재정운용과 공개, 그리고 발전된 정보통신기술 활용은 각각이 하나씩 분리된 것이 아니며, 선후관계도 아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양적으로 팽창한 정부재정이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정부재정의 도달범위를 넓혀주기도 한다.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역시 정보통신 기술 발전, 정부 재정 팽창과궤를 맞추어 발전해오고 있다. 3개의 축은 정부 관리기술 발전과 행정개혁의 핵심요소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국고보조사업은 양적, 질적으로 그리고 관리기법상으로도, 전산지원 측면에서도 지난 20년간 꾸준히 발전해왔다.

이 시점에서 외국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단순히 외국의 새로운 것, 발전된 것을 참고하여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외국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문제, 즉 기존의 것을 꾸준히 발전시켜나가면서, 미진한 부분을 분석해 개선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간 양적팽창에도 그 관리에 있어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가, 여전히 성과 중심으로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업무 전산화에 있어 누락된 부분은 없었는가 등은 행정업무 개선이 얼마나 국민에게 체감되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핵심질문들이다.

미국은 지난 20여 년간 보조금 사업관리와 관련된 수십 개의 시스템의 업무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을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증거기반 정책관리라는 새로운 사업관리 영역이 만들었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2016년 보조금관리 통합시스템을 개통하고,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상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개혁과 제도개선을 꾸준히 시도해오고 있다. 그동안은 전산 시스템과 정보통신 기술 이용이 주로 제도개선에 후행하는 것으로만 인식했다면, 최근에는 축적된 정보의 활용, 개선 및 확대가 하나의 테마가 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차원의 개선도 상당히 진척되어 왔다. 국고보조사업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이 2017년 개통했으며, 국가재정관리시스템인 dBrain은 2013년 성과정보 관리시스템 개통을 거쳐 2017년 재정사업 성과지표 데이터베이스 오픈, 2020~2022년 차세대를 거쳐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을 개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를 통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국고보조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이 생산, 축적되고 있다. 이들 정보를 재정의사결정에 활용하고 국민에게 알기 쉽게, 성과지향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다시 한번 데이터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은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단계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추진해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축적된 정보를 관리,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절차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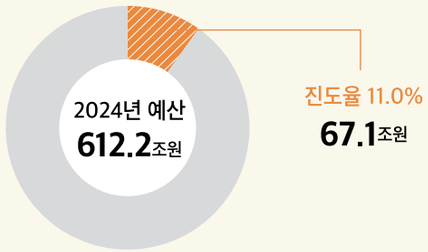
데이터를 확보하기 쉽고 용이하게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업무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베이스 개선이다.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활용성을 확인한 후, 추가적인 보강을 통해 활용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후 전 부처 재정관리 업무로 활용을 확대한다. 첫 단계가 주로 재정당국의 재정성과정보 활용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단계에서는 전부처의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정보관리 차원에서 개선점을 도출하고 활용을 확산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의 정보제공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를 전면 공개해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2024년 1월 기준 **재정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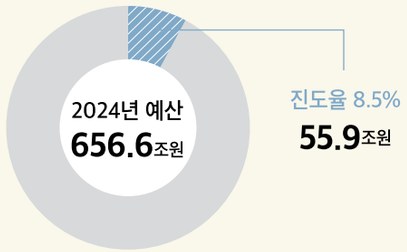


※ '23년 말 기준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는 기금 결산(2월말)을 거쳐 4월초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 예정

총수입 **67.1**조원



총지출 **55.9**조원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11.2조원 흑자 (누적 기준)	**8.3**조원 흑자 (누적 기준)

주: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예산 대비 당월 누계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4.3.

총수입 · 총지출

총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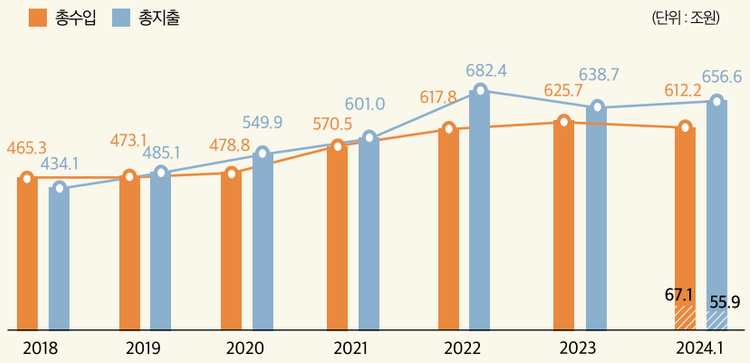
67.1조원

전년 동기 대비 **+5.7**조원

총지출

55.9조원

전년 동기 대비 **+4.8**조원



주: 2022년까지는 결산, 2023년부터는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11.2조원 흑자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관리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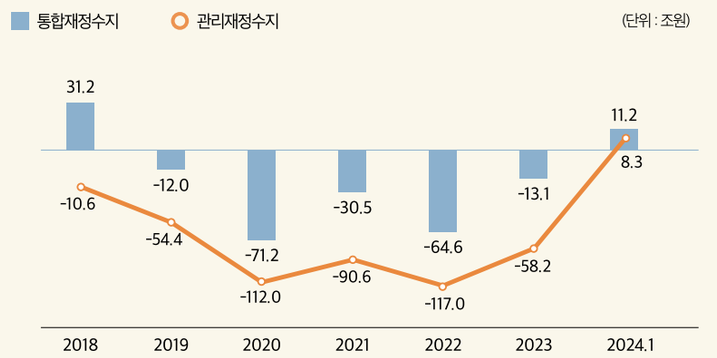
8.3조원 흑자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9조원 흑자





주: 2022년까지는 결산, 2023년부터는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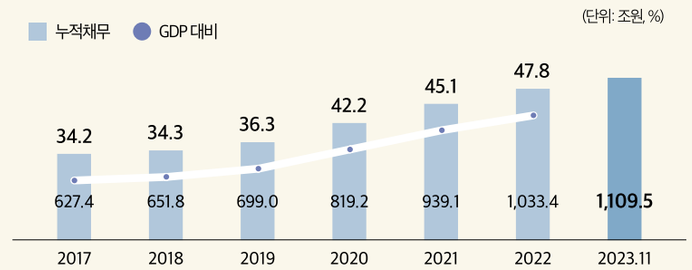
국가채무 ('23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1,109.5조원

전월 대비 **+4.0**조원

전년 말 대비 **+76.0**조원



주 1) 국가채무(중앙정부) 통계 수치는 2023년 결산수치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2023년 11월 말 기준 통계 수치 제공
2) 중앙정부 채무 기준
3)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4) 2023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한국은행 GDP 규모 확정 시 제공 예정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해외재정동향

재정정보분석센터

주요국

1) 미국

◎ 3차 잠정예산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원은 연기 의지가 없음을 밝힘

◎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 증세와 사회보장지출 확대에 초점을 둔 '25년 연방예산안 공개

2) 영국

◎ 재정준칙 개편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 강조, 신규 차입은 자본투자에 한해 허용할 것

◎ 재정여력이 축소하는 상황에서 정부수입은 매우 느리게 증가, 재정준칙 개혁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정정책 마련 필요

◎ 재무부는 총선을 앞두고 100억파운드(약 17조원) 가량의 감세가 포함된 2024-25 회계연도 예산 발표

3) 독일

◎ 채무준칙(debt-brake) 논란 고조, 글로벌 금융기관인 BNP 파리바는 재정준칙의 이점과 한계를 주제로 상반된 입장 제시

◎ 독일 총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 예산 정책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GDP의 2% 이상으로 국방 예산을 증액할 것을 약속

4) 프랑스

◎ 프랑스 재무장관, 예상보다 낮은 경제성장은 세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부 지출을 100억 유로 삭감 발표

5) EU

◎ EU 재정준칙 개혁 합의, 디지털·친환경·국방 부문의 전략적 투자를 보장하고, 성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회원국의 부채비율과 재정적자를 줄여나갈 것을 목표

◎ 유럽 의회 선거를 앞두고 유럽 좌파 정당은 전략적 분야의 지출 촉진을 위해 EU 재정준칙 폐지 요구

국제기구

6) 세계은행

◎ 세계은행은 전 세계적으로 구조적인 경제성장 둔화가 진행 중이라고 평가하며, 장기 전망 하락에 대한 요인 분석과 함께 경제성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옵션 제시

7) OECD

◎ 세계 경제 성장률은 '23년 3.1%에서 '24년 2.9%로 하락한 후 '25년에는 3.0%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는 내용의 중간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발표

미국

2.25.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잠정예산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원은 연기 의지가 없음을 밝힘[1]

- **미국 연방의회는 지난 1월 '24회계연도 본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3차 잠정예산을 처리했으며, 그 기한은 3월 1일과 3월 8일로 얼마 남지 않음**
  - 대규모 예산 삭감을 요구해 온 공화당 내 하원의원들은 최종 예산안 처리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 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 상원과 하원 예산 담당자들은 기한 내에 세출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당 의원들은 여전히 셧다운과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잠정예산으로 운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
- **이번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지속적인 충돌과 반복적인 잠정예산 편성으로 '25회계연도 예산 편성도 늦어지고 있음**
  - '24회계연도 중 네 달이 지났고 작년 9월 말부터 세 번째 단기 자금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대선을 앞두고 '25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기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

3.11. 금년 국방, 국토안보, 노동, 보건복지부 등 6개 부문의 잠정예산 시한을 3월 22일까지로 추가 연장한 가운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의 '25회계연도 예산안 공개[2]

- **예산안 규모는 7조 3천억 달러로 사회보장지출은 확대하면서 부자·기업 증세 추진으로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3조 달러 감축 목표**
  - 지출 확대 : 영유아 부모 대상 육아 보조금 지원, 처방약 가격 안정을 위한 예산 별도 편성, 평균가격 이하의 주택 신축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 배정
  - 부자, 기업 증세 : 고소득자의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 자산 1억달러 이상 억만장자에 연 25%가량 자산세 명목의 소득세 부과, 법인세 최고구간 인상(21%→28%), 대기업 최저세율 21%로 인상

영국

2.18. 영국 경제는 재정 준칙의 개편을 통한 재정 신뢰도 제고와 공공투자 확대가 중요[3]

- **영국의 핵심적 문제는 지난 14년간 투자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
  - 타국에 비해 기업이 상장되는 수가 적고 생산성과 실질 임금이 정체되어 있다고 분석

1) https://www.politico.com/news/2024/02/15/congress-government-funding-fight-00139173
2) https://www.cnbc.com/2024/03/11/bidens-2025-budget-marries-progressive-tax-hikes-with-populist-campaign-planks.html
3)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4/feb/18/first-step-to-economic-liberation-is-to-tear-up-these-fiscal-rules-will-hutton

- **공공투자를 대폭 늘릴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고 재정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
  - 재정 준칙의 목적은 정부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공적 행동을 제고하는 것
  - 공공지출은 경기 사이클에 따라 세입과 균형을 이루고, 지속적인 차입은 자본 투자를 위해서만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
  - 공공지출 감소는 불평등 심화, 공공서비스 감소, 국방 및 안보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따라서 공공투자를 GDP 대비 3% 이상 증가시키는 방안 필요
- **영국은 유럽과 방위 협력 및 안보 협정이 필수**
  -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고 필수적인 국방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 수준의 세금이 필요하며, 균등한 납세를 위한 변화가 필요

2.23. 재정지출 증가 압력과 정부 수입의 점진적 증가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준칙 개편 필요[4]

- **공공서비스는 수년간 저투자로 인한 압박, 불가피한 부채 이자 비용 증가, 국방, 투자, 의료 및 인구 고령화 등 재정 소요 요구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 수입은 매우 느리게 증가**
- **재정 프레임워크 및 재정준칙 개편을 통해 정부는 장기적인 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신중한 재정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언**
  - 정책의사 결정이 미칠 수 있는 장기적 결과에 중점을 두기 위해 예산책임청의 추가 분석과 공공부문 순자산 측정 개발 필요
  - 재정준칙 기간은 5년보다 단축시켜야 하고, 투자와 일상적 지출의 구분, 정부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 확보 필요

3.6. 재무부 장관(Jeremy Hunt), 국민보험료율 2%p 인하를 포함하여 100억 파운드(약 17조원)[5]의 감세조치가 담긴 봄 예산(spring budget) 하원에 제출

- **영 예산책임청(OBR)은 경제전망의 개선으로 GDP가 금년 0.8%, 내년 1.9% 성장하며 물가 또한 현재 4% 수준에서 금년 중 2%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
  -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현재 98%가량이나 5년 후 94%수준으로 하락하여 준칙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
-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세제 측면에서는 국민보험료율 2%p 인하 이외에도 비거주자 과세지위 폐지에 따른 부자증세, 연료세 및 주류세 동결, 항공승객세 인상, 에너지 횡재세 연장 등의 조치가 포함
  -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350억파운드의 효과가 있는 NHS의 IT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34억 파운드를 투입하는 등 공공부문 생산성 향상에 투자하면서, 지출증가율 1% 증가 계획을 유지할 것
  -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이 선거를 의식한 것이며, 총선으로 집권당이 바뀌는 경우 6개월짜리 정책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분석

독 일

2.12. '23년 예산 및 '24년 예산안 위헌 판결로 채무준칙(debt-brake)에 대한 논란 고조, 글로벌 금융기관인 BNP 파리바는 독일 채무준칙의 이점과 한계에 대해 분석[6]

- **작년 9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채무준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BNP 파리바는 '독일 부채 한도: 재정준칙의 이점과 한계'를 주제로 준칙 존폐에 관한 상반된 입장 제시**
  - 논쟁은 재정정책이 준칙에 기반해야 하는지,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혁신적 공공 지원 등 막대한 투자 수요를 고려하는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지로 요약됨
- **채무준칙에 관한 Ifo 경제연구소와 FAZ 공동 설문조사 결과, 경제전문가의 48%는 현행 유지, 44%는 개선을 원하며, 6%는 폐지를 주장**
  -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 수요와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채무준칙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채무준칙을 고수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함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의견이 분분
- **최근 독일 경제전문가위원회는 부채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면서도 재정정책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실용성 있는 개혁 주장**
  - 신규 차입 범위를 0.35%로 유지하되 부채 비율에 따라 이를 조정하도록 권고했으며, 비상사태 등으로 부채 한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면 이후 과도기 기간을 두어 경제적 충격을 덜 받도록 하는 내용 포함

2.25. 독일 총리,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이상 규모로 증액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지출 목표 달성 약속[7]

- **국내총생산의 2%는 나토가 정한 국방예산 정책 목표로, 독일의 국방예산은 지난 20여년 동안 국내총생산의 1.1~1.4%에 머물러 미국 등으로부터 비판받아 왔음**
  - 최근 미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발언 중, 나토 가입국 중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은 회원국에 대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데 영향
  -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 유럽 국가 정상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유럽의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발표

4) https://www.instituteforgovernment.org.uk/article/comment/fiscal-fantasies-fiscal-framework
5) https://www.cnbc.com/2024/03/06/uk-budget-jeremy-hunt-set-to-deliver-crucial-pre-election-budget-announcements.html
6) https://economic-research.bnpparibas.com/html/en-US/German-debt-brake-merits-limitations-fiscal-rules-2/13/2024,49354
7) https://www.forbes.com/sites/simonconstable/2024/02/25/germanys-latest-challenge-to-its-economy-boosting-military-spending/

- **한편 독일 경제는 작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0.2% 하락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리스크가 높았던 전년 겨울과 비교해도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태**
  -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예산 유용 위헌 판결로 인한 재정긴축 상황에서 국방 예산 증액에 대한 요구는 독일 정부에 부담이 되는 상황

프랑스

2.19. 프랑스 정부, 예상보다 낮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100억 유로 규모의 정부지출을 추가 삭감하며 긴축정책 결정[8)]

-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성장 둔화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프랑스는 올해 1%의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며, 이는 이전 예측치인 1.4%보다 저조한 수치**
  - 재무장관(Bruno Le Maire)은 "성장률이 낮은 것은 세수 감소를 의미하므로 정부는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 발표
- **'24년 예산에는 이미 에너지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로 인해 약 160억 유로의 삭감이 포함되어 있으나, 올해 재정적자를 4.4%로 줄이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 삭감이 필요**
  - 르메이어 장관은 적자 보전을 위한 증세는 없을 것이라 약속하며, 세금 인하 기조 유지 약속
- **100억 유로의 삭감액 중 절반은 정부부처에서, 나머지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주택 개조 보조금과 국제 원조 정책자금을 축소하여 마련 예정**
  - 한편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방 지원을 위해 30억 유로를 편성해 주요 우선 순위에 대한 지출 확대

유럽연합 (EU)

2.10. 유럽연합은 오랜기간 지연된 재정준칙 개혁에 합의, 과잉 부채 감축 촉구 및 채무 수준이 높은 국가에 긴축 재정을 규정[9)]

- **EU 이사회는 2월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재정준칙 개편안에 잠정 합의함**
  - EU 이사회 및 의회는 디지털, 친환경, 국방 등과 같은 전략적 투자 분야를 보장하면서 점진적이고 경제성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부채비율과 재정적자를 줄이는 목표를 유지하기로 합의
  - 재정준칙 개편안은 이후 각 회원국과 EU 의회 공식 승인을 거쳐 법으로 제정되며, '25년부터 적용될 예정
- **재정준칙 개편안의 골자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는 각각 GDP의 60%, 3%로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하면서, 이를 초과할 경우 즉시 제재가 아닌 부채감축 기간을 부여하는 것임**
  - 초과 부채 수준을 가진 국가들에게 4~7년에 걸친 부채 감축 기간을 부여해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여력을 확보
- **글로벌 금융기관 BNP 파리바 분석에 따르면, 재정준칙이 재시행됨에 따라 향후 2년간 유로존의 GDP가 평균적으로 0.1~0.2%p 낮아질 것이라 분석**
  - 또한 스페인은 유로존 회원국 중 가장 큰 규모로 재정 긴축을 단행해야 하며, 독일의 경우 재정준칙의 재시행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

2.20. 유럽 의회 선거(6.6.~6.9.)를 앞두고 유럽 좌파 정당은 사회 및 환경 지출 촉진을 위해 EU 재정준칙 폐지 요구[10)]

- **유럽 좌파정당(European Left party)은 EU 재정준칙인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을 사회 및 환경 지출에 중점을 둔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
  - 좌파당의 요구는 SGP가 기존보다 더 유연해졌으나, 전반적인 경제 불황기에 중요한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저해한다는 비판에서 비롯됨
  - 당대표(Walter Baier)는 "유럽연합 경제 거버넌스가 제한적인 규모 목표에 일방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
- **또한 유럽 좌파정당은 건전한 공공재정에 찬성하지만, 회원국의 재정 규모와 부채 수준을 측정하는 것보다 기후위기, 빈곤, 낙후된 공공서비스 등의 우선순위가 존재함을 강조**
  - 많은 유럽 시민이 생활비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반면, EU는 전례없는 군사력 증강을 위해 수십억 유로를 지출하고 있음을 지적
- **한편 2월 중순 발표된 유라티브(Euractiv) 유럽 선거 전망에 따르면, 좌파 연립정당은 6월 투표에서 705석 중 4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세계은행 (World Bank)

2.1. 장기 경제성장 전망 하락에 대한 동향, 기대치 및 정책 관련 보고서 발간[11)]

- **전 세계적으로 구조적인 성장 둔화가 진행 중이며, 현재 추세에 따르면 2030년까지의 글로벌 잠재성장률은 3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

8) https://www.ft.com/content/02e6cca7-6cdd-44e3-9d1e-71ea9883f4b2
9) https://www.ft.com/content/aa67e22c-396a-4b3f-88ad-14a04ec7f031
10) https://www.euractiv.com/section/economy-jobs/news/left-party-vows-to-slash-eus-fiscal-rules-ahead-of-elections/
11)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entities/publication/5c24beac-0ebb-4732-8078-d6252fca4a08

– 1990년대 초반 이후 대부분 국가의 성장 동력 약화와 함께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로 인한 충격, 노동력의 고령화, 국제 무역 성장률 하락 등에 기인
– 주요 선진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다른 국가로 확산될 경우, 잠재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성장 둔화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 장기 경제성장 전망의 지속적인 큰 폭의 하락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빈곤 해소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기타 주요 경제 개발 계획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고 평가

• **성장 둔화 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계은행은 경제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 전략, 국가 차원의 협력 등 다양한 정책 옵션 제시**
– 모든 국가가 최근 시행한 최선의 정책을 바탕으로 견고한 거시경제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대대적인 투자를 병행한다면 2020년대 말에는 경기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음
– 인적 자본과 노동 참여를 장려하고 기후 관련 투자를 강화해야 하며, 국가 차원의 정책 시행을 위하여 국가 간 협력 강화와 국제 사회의 자금 지원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 중간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발표[12)]

• **세계 경제 성장률은 '23년 3.1%에서 '24년 2.9%로 하락할 것이나, 금융 여건 완화로 '25년에는 3.0%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예상보다 빠른 인플레이션 안정으로 '23년 세계 경제는 탄력적으로 회복되었으나, 미국과 신흥국의 견조한 성장세는 유럽지역 국가들의 성장 둔화로 상쇄
– 신용 및 주택 시장에서 금융 여건 긴축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 무역이 여전히 침체된 가운데 운송 비용 상승과 배송 일정 지연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 압력과 급격한 인건비 상승, 지정학적 긴장 고조,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금융 여건 변화 등을 경제성장의 리스크로 평가하며 이에 대한 몇 가지 정책 권고**
– 근본적인 물가 상승 압력 완화를 위해 통화정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인플레이션 하락에 따라 제한적으로 정책 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함
– 각국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향후 리스크에 대비하여 단기적으로 재정지출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를 준비해야 함
– 교육 체계 개선과 역량 개발 강화, 노동시장 제약 완화 등을 위한 정책을 통해 미래 성장을 준비해야 하며, 세계 무역 여건 개선과 탈탄소화 등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함

12)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economic-outlook/volume-2023/issue-2_0fd73462-en

「경제협력개발기구 중간 경제전망」(성장률, G20 국가)

(%, %p)	'23년	'24년 전망		'25년 전망	
전망시점		'23.11월	'24.2월	'23.11월	'24.2월
전세계	3.1	2.7	2.9	3.0	3.0
G20	3.3	2.8	2.9	3.0	3.0
유로존	0.5	0.9	0.6	1.5	1.3
호주	2.0	1.4	1.4	2.1	2.1
캐나다	1.1	0.8	0.9	1.9	1.9
독일	△0.1	0.6	0.3	1.2	1.1
프랑스	0.9	0.8	0.6	1.2	1.2
이태리	0.7	0.7	0.7	1.2	1.2
스페인	2.5	1.4	1.5	2.0	2.0
일본	1.9	1.0	1.0	1.2	1.0
한국	**1.3**	**2.3**	**2.2**	**2.1**	**2.1**
멕시코	3.1	2.5	2.5	2.0	2.0
튀르키예	4.1	2.9	2.9	3.2	3.1
영국	0.3	0.7	0.7	1.2	1.2
미국	2.5	1.5	2.1	1.7	1.7
아르헨티나	△1.0	△1.3	△2.3	1.9	2.6
브라질	3.1	1.8	1.8	2.0	2.0
중국	5.2	4.7	4.7	4.2	4.2
인도	6.7	6.1	6.2	6.5	6.5
인도네시아	4.9	5.2	5.1	5.2	5.2
러시아	3.1	1.1	1.8	1.0	1.0
사우디	△0.9	3.0	2.4	4.7	4.2
남아공	0.5	1.0	1.0	1.2	1.2



절대왕정의 재정학: 관방주의

옥동석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전)조세재정연구원장 (dsoak@naver.com)

중세의 봉건제도가 끝나고 자유주의가 발흥하기 시작한 17세기와 18세기, 유럽에서 절대왕정의 부국강병을 위해 등장한 경제사상을 대체적으로 중상주의(mercantilism)라 한다. 중상주의의 내용을 어떤 체계적인 사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그 논자들 사이에는 나름의 공통점이 존재하였다. 한 국가의 부(富)는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금과 은의 양이며, 이들의 유출을 막고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호무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중상주의 사상은 한 국가의 이익은 필연적으로 다른 국가의 손실이 되는 제로섬(zero-sum)의 세계관을 기초로 하기에 현대 경제학에서 수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구 전체에서 인류가 사용가능한 자원과 귀금속의 양은 사전에 한정되어 있고, 기술진보가 정체된 산업화 이전의 정적(靜的)인 사회구조 그리고 제국주의적 침략이 용인되는 경쟁적 국가건설 시대에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이후 고전파 경제학이 국제무역을 포지티브섬(positive-sum) 게임으로 입증하면서 -아담스미스(Adam Smith)의 절대우위, 리카아도(David Ricardo)의 비교우위- 중상주의는 점차 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

중상주의의 독일식 버전: 관방주의

거의 같은 시기에 독일(신성로마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 유럽에서는 관방주의자들(cameralists)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국가를 다스리는 국왕, 제후, 여타 왕족들의 조언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영사업을 운영하는 관리자들이었다. 독일어 관방주의(kameralismus)는 국왕이나 군주의 보좌관들이 일을 하기 위해 모인 방이나 회랑을 가리키는 카머(kammer)에서 파생하였다. 이들은 학술적인 자문가로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들로부터 이윤을 창출하는 경영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현대적 개념에서 볼 때 이들은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법학 등 통합적인 융합학문을 통해 국정을 뒷받침하는 '국정관리론(staatswirtschaft)'을 펼쳤던 것이다.

관방주의는 국가간 경쟁이 치열했던 절대왕정의 체제 속에서 왕국의 통치자들을 위한 학문이었기에 중상주의와 대부분 동일하였다. 그러나 관방주의자들이 처한 국제적 환경은 중상주의자들과 크게 달랐다. 중상주의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대규모 식민지를 통치하였던 중앙집권식 서유럽 국가들을 배경으로 하였던데 반해, 관방주의가 지배하던 중부 유럽에서는 정치적 분열이 매우 극심하여 300개 이상의 독립적 통치단위들이 경쟁하고 있었다.[1] 물론 중부 유럽에서 강대국이었던 오스트리아가 존재하였지만 서유럽 강대국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주권국가들을 서로 다른 색깔의 영역으로 표시하였는데, 30년 전쟁 직후인 1648년의

〈그림〉 1648년의 유럽 지도



자료: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Europe_map_1648.PNG

1) 30년 전쟁(1618-38)으로 독일어권 지역의 전체 인구는 2,100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약 3분의 1 정도 감소하는 대학살이 있었다. 1648년에 체결된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은 300개 이상의 주권국가들에게 주권평등의 원칙으로 종교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유럽지도를 보여주고 있다. 중부 유럽의 신성로마제국(독일)이 수많은 소규모 국가들로 분열되어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서유럽 국가의 통치자들은 식민지를 정책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국제무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제국의 내부와 외부로부터 노동 및 자원의 이동성은 매우 낮았고 넓은 지리적 영역에서 중앙집중식 통제를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었기에 조세를 부과하기가 쉬웠다. 식민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세금을 징수하기보다 징수도급(tax farming)을 통해 막대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들 국가의 통치자들은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최적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방주의 국가들은 정치적 분열이 극심하였고 경제적으로 저개발 상태에 있었기에 체제의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2] 인구는 봉건적 제약으로 토지에 묶여 있었지만 사실상 유동적이었기에 국가들 상호 간에는 노동과 재산의 이동이 비교적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영토 사이의 거리는 매우 짧았기에 이웃 국가로 여행하는 농부들이 자국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특히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구는 극도로 감소했기에 통치자들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 인구증가를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체제의 생존을 위해 군사적 역량의 개선과 경제발전이 필요하였으며, 이는 다시 개선된 기술의 획득, 새로운 기업의 창출 및 인구증가, 인구 내 인적자본의 개선을 필요로 하였다.

관방주의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봉건제도가 지배하고 있었기에 중앙집중식 과세는 불가능하였고, 또 이들 영토의 파편화된 특징으로 인하여 높은 자원 이동성이 보장되면서 과세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대신 통치자들에게는 다양한 자원에 대한 소유권이 폭넓게 보장되었는데, 이는 관방주의 국가의 재정수입을 중상주의와 다른 형태로 발전시켰다. 관방주의 군주들은 재정수입으로서 국유토지와 국영기업으로부터의 -농업 및 광업 사업, 우편 및 교통 서비스 등- 순수입을 많이 누릴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비(非)관방주의 국가들에서는 사업 순수입이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하였다.

<표 1>은 19세기 후반 국영농장에 의한 순수입을 국가총수입의 백분율로 보여주고 있다. 비(非)관방주의 국가에서는 총수입의 2~4%를 차지하지만, 관방주의 국가에서는 이들보다 훨씬 높은 10~17%를 기록하였다. 관방주의 국가재정에서 국영사업 순수입은 국영농장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2>는 관방주의 시대가 끝나고 약 2세대가 지난 후인 1896~1898년 동안 독일권에 속하는 주권국가의 국영기업 순수입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네 개의 큰 국가들을 예시하였는데, 이들의 기업순수입은 총국가수입의 30~60% 범위였다. 이는 세금이 국가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했던 서부 유럽의 국가재정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표 1〉 19세기말 국영농장수입 비중

국 가		국영농장수입/총수입(%)
비-관방 국가	프랑스	1.5
	네덜란드	1.9
	덴마크	2.9
	영국	3.0
	이탈리아	3.0
	러시아	3.6
	그리스	3.6
	오스트리아-헝가리	3.9
	스위스	4.1
관방 국가	바덴(Baden)	7.2
	삭소니(Saxony)	9.7
	뷔템버그(Württemberg)	13.2
	프러시아(Prussia)	16.4
	바바리아(Bavaria)	17.3

〈표 2〉 관방-전통 국가들의 국영기업 수입 비중 (1896-1898)

국 가	국영기업수입/총수입(%)
삭소니(Saxony)	59.5
뷔템버그(Württemberg)	56.8
프러시아(Prussia)	47.7
바바리아(Bavaria)	30.7

자료: Wagner, R.E.(2012), p.128 참조.

조세에 대한 금언: 아담스미스 vs 유스티

관방주의 국가들이 재정수입 구조에서 중상주의 국가들과 확연하게 달랐다는 사실은 학자들의 연구에도 반영되어 있다. 관방주의의 대표적 학자인 유스티(Johann Heinrich Gottlob von Justi)는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군주는 실패한 군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에 의하면 군주는 자신의 재산들을 잘 관리함으로써 정권을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유스티는 1771년에 과세 원칙들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서유럽 국가에

2) 관방주의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설명은 Wager, Richard E.(2012), "The Cameralists: Fertile Sources for a New Science of Public Finance," in J. G. Backhaus, ed., *Handbook of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New York: Springer, 2012, pp.123~135 참조.



서 아담스미스(Adam Smith)가 1776년의 국부론에서 제시한 과세 원칙들과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3] 유스티의 과세 원칙들은 재정학 문헌에서 거의 소개되지 않지만, 유스티와 아담스미스를 비교하는 것은 관방국가의 재정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아담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조세에 대한 금언(金言, maxim)을 네 가지로 언급하였다.[4] 첫째, 사람들이 정부서비스로부터 받는 편익에 비례하는 자신의 능력에 기초해야 하고; 둘째, 임의적이 아닌 확정적인 기준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며; 셋째, 편리한 방법으로 부과되어야 하고; 넷째, 행정적으로 용이해야 한다. 유스티의 금언은 이 네 가지를 모두 포괄하면서 -비록 배열 순서는 달랐지만- 추가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세금이 납세자의 필수품을 박탈하거나 자본을 줄이도록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금이 납세자의 후생을 훼손하거나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가적 원칙들을 통해 유스티는 아담스미스보다 과세에 대해 훨씬 더 강력한 제한을 두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과세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재정수입에서 조세의 중요성에 대한 유스티의 견해가 아담스미스와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담스미스는 세금이 정부재정의 유일한 원천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과세를 재정자금 조달의 주요 원천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아담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조세 금언을 설명하기 전에 국유재산과 이들로부터 파생되는 수입을 정부로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5] 반면 유스티는 조세의 금언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조세가 재정수입의 최후 수단 또는 부차적 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적으로는 국가가 세금을 전혀 거두지 않고 기업적 운영을 통해 확보하는 수입으로 국가를 운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담스미스는 과세를 정부재정의 첫 번째 수단으로 간주하였지만 유스티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처럼 관방주의는 세금이 산업과 상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능한 낮은 세율로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중상주의자이건 고전파 경제학자이건 세금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높은 세금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중상주의 제국과 달리 관방주의 국가들에서는 인력과 자원의 이동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과세가 산업 및 상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훨씬 더 강력하게 표출되었던 것이다. 관방주의의 이러한 시각은 재정수입에서의 조세 지위가 개별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달라져야 한다는 시사를 주고 있다.

기업가로서의 국가

조세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관방주의 국가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가는 자금조달에 필요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재산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 활동의 중요한 부분들을 기업적 수입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재산을 가지는 것처럼 국가도 재산을 소유해야 하고, 국가경영의 개념은 민간기업의 경영이나 가계살림의 개념과 동일하다. 심지어 일부 관방주의자들은 세금의 용도가 군사비에 한정되어야 하고 국내의 발전을 위한 모든 활동들은 군주의 기업적 순수입에서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활동을 위한 비용은 그 신민들(subjects)의 사적 수단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기에 모든 재원은 국가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토지와 기업으로부터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토 내에서 국가는 많은 기업들을 소유하며 그 자체가 하나의 기업집단이 되는 것이다.

국가를 일종의 기업으로 간주하는 시각은 경제질서 내에서 정부를 하나의 참가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관방주의자들은 국가를 -또는 정부를- 경제질서의 외부자가 아니라 내부자로서 인식

3) 유스티의 과세원칙은 Justi, J.H.G.(1771), *Natur und Wesen der Staaten*에 수록되어 있다. 유스티와 아담스미스의 과세원칙에 대한 비교 논의는 Wagner(2012)와 함께 Wagner, Richard E.(2019), *Public Debt as a Form of Public Finance*, Elements in Austrian Economics, edited by Peter Boettke, 2019, pp.6~8 참조.

4) 아담스미스의 국부론 번역서로서 김수행 역(2007), 「국부론」, 비봉출판사, pp. 1016-1019 참조.

5) 아담스미스는 조세의 금언을 제시하기 전에 "왕 또는 국가에 특별히 속하는 두 가지의 수입 원천인 국유자본과 국유지는 대 문명국의 필요 경비를 지탱하는 데 부적절하고 불충분한 재원이기 때문에, 이 경비의 대부분은 여러 종류의 조세에 의해 조달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김수행 역(2007), p.1016 참조.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국가가 경제사회의 외부에서 독자적인 목적을 -예컨대 공익이나 사회 후생 극대화를 추구하는- 갖고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현대의 개념과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국가의 임무는 경제사회에 대한 개입이지만 관방주의 국가관에서는 경쟁이 치열한 많은 산업들 내에서 공정하게 참여하는 것이었다.

국가관의 이러한 차이는 조세에 대한 금언의 차이를 초래하였다. 아담스미스는 국가 개입의 부정적 측면을 제한하려고 한 데 반해, 유스티는 경제질서 내에서 국가를 가치 있는 참가자로 만드는 제도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아담스미스의 국가관은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경제질서에 개입하는 강제력으로서의 국가이기에, 국가는 경제질서의 바깥에서 작동하는 실체이다. 반면 유스티에 의하면 국가는 경제질서 내에서 평화롭고 생산적인 참여자일 뿐이기에, 국가는 민간의 경제주체들과 동일한 원칙과 법치에 따라 운영되는 여러 참가자들 중 하나이다. 따라서 국가를 기업처럼 경영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관방주의 재정에서는 국유토지와 기업을 정부 보조금의 수령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국영기업은 여러 혜택들을 누리는 독점적 기업이 아니라 여러 경쟁기업들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군주는 자신의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경쟁 우위를 보장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들 국가에서는 군주가 특정한 민간기업들을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을 거의 또는 전혀 갖지 못했다. 본질적으로 통치자는 사업가로 해석되었고 그들의 사업은 국가라는 기업 집단을 경영하는 것이었다.

정부지출에 대해서도 관방주의자들은 자본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현재의 지출사업이 미래에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해야 한다고 보았다.[6]정부의 지출은 미래의 생산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이어야 하기에 투자로 간주되었다. 정부투자의 성공 여부는 정부사업의 미래 수입에 대한 전망치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비용과 편익에 대한 추정과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편익은 프로그램이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의 미래 흐름이 되어야 한다. 군주가 사망한 후에도 그 후손들이 왕가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투자의 시계(視界)는 상당히 먼 미래가 될 것이다. 따라서 관방주의자들은 외국인 유치와 인적자본 형성에 큰 관심을 보이며, 특히 학교와 대학의 설립을 통한 연구와 지식의 생산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6) Backhaus, Juergen and Richard E. Wagner(1987), "The Cameralists: A Public Choice Perspective," *Public Choice*, Vol. 53, No. 1, pp.3-20 참조.

관방주의의 현대적 교훈

관방주의는 현대의 재정학 논의에서 거의 소멸되어 박제된 화석으로 남아 있다. 절대왕정 체제가 민주적 공화정으로 전환하면서 -또한 독일도 통일을 이루면서- 전세계 모든 국가들은 재정수입을 조세로 충당하는 '조세형 국가'(tax state)로 전환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패전국 오스트리아에서 정부의 채무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 수단으로서 '기업형 국가'와 '조세형 국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이후 학계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있다.[7]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과 개방경제의 놀라운 성장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 자본과 인구의 양은 경이적으로 증가하며 세계 경제는 이전보다 훨씬 더 통합되었다. 개인들의 투자자 또는 소비자로서의 역할이 국외에서 크게 증가하면서 인구의 국경간 이동성은 높아지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거주하는 국가의 외부에서 소득을 벌고 소비를 하면서 국적의 이동이나 이중국적 또한 증가하고 있다. 세계화에 따른 개방경제화는 화석화된 관방주의 재정학에 대해 새로운 흥미를 촉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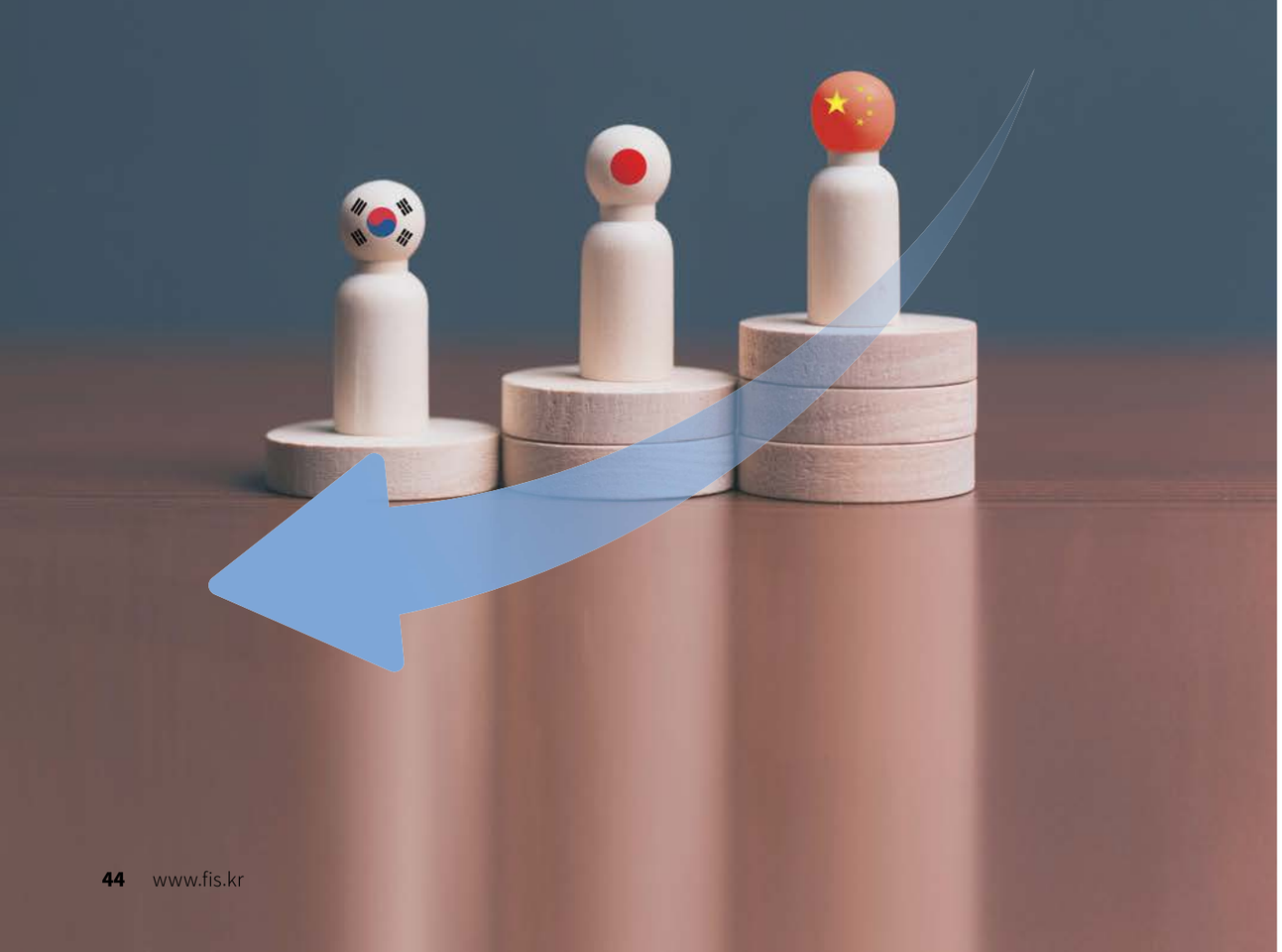
잘 알려진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은 한 국가의 과세 기반이 누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재정경쟁(fiscal competition)'은 세금수입의 용도, 즉 개인이나 기업이 납부한 세금의 대가로서 수령하는 정부서비스와 공공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금융자본과 기업 그리고 개인의 이동성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현재 수준뿐만 아니라 장래의 전망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들은 향후의 세율인상과 통화증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와 개방경제는 '조세형 국가'의 재정운용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2024년 현재 전 세계에는 크고 작은 국가들이 195개에 달하고 있다. 300여개의 주권국가들이 경쟁하던 시기에 등장하였던 관방주의가 현대의 소규모 개방경제에 시사하는 정책적 의미는 예사롭지 않다. 한정된 자원 내에서 최적 선택을 추구하는 현대의 재정이론과 달리, 현실의 정책에서는 재정운용에 대한 국제비교가 -OECD 국가들의 평균치 등- 훨씬 더 중요한 준거가 되고 있다. 관방주의에 대한 학문적 평가가 지금 무엇이건 관계없이, 개별 국가가 처한 환경에 따라 재정운용의 패러다임이 -더 나아가 재정학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은 논박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7) '기업형 국가'의 Rudolf Goldscheid와 '조세형 국가'의 Joseph A. Schumpeter 사이의 논쟁 개요에 대해서는 Backhaus, J.G.(1989), "Taxation and Entrepreneurship: An Austrian Approach to Public Finance," *Journal of Economic Studies*, Vol.16, No.2, pp.5-22 참조.

인구감소 시대
미래 한국경제의 모델 국가

배국환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



현재 한중일 3국은 공교롭게도 똑같이 인구감소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유엔의 2019년 세계 인구 전망에 의하면 이들 국가들은 2100년 까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그때 가면 현재 인구수의 58%~74% 수준으로 줄어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에 세계의 인구는 현재 80억 명에서 2070년 103억 명, 2100년에는 109억 명으로 늘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 세계의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중일의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사실 유럽 국가들이 90년대 초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동북아 3국은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다. 인구 증가의 대부분은 아프리카나 개발도상 중인 아시아 국가들이 만들어 낸 것이다.

동북아의 세 나라는 쌀을 주식으로 하면서 가부장적인 유교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감소는 재앙일까. 아니면 축복일까. 이 문제는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구감소를 재앙으로 보는 이유는 노동인구·소비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성장이 위축되고 젊은이들의 부양부담이 늘어나는 한편 국가재정·연금재정 등의 세입이 줄어들면서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소멸위험지역은 52%를 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 들어 각급 학교 들이 문을 닫는다. 지난해 신입생이 10명도 안 되는 초등학교가 전국에 1587개나 된다. 병역자원이 줄어 들면서 국가안보에 위협 요인이 증대되고 있다. 산부인과 찾기가 힘들고 대학은 학생 모집이 힘들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 현상인 '벚꽃엔딩'이라는 말이 들린다. 지하철에는 노인 반 젊은이 반이다. 전국적으로 빈집이 139만 채에 달한다. '소멸국가'가 어른거린다. 인구감소로 나타나는 작금의 현상들을 보면서 국가가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부은 400조원 이상의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인구감소를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왕펑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인구가 줄어야 사람이 귀해진다" 진화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는 "모든 환경문제는 인구문제다. 출산율 회복 안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다. 지구촌 전체로 보면 인구가

전세계 및 동남아 3국 인구 전망

(명)

	전세계	한국	중국	일본
2022년 (A)	80억	5,133만	14억 4,847만	1억2,558만
2070년 (B)	103억	3,854만	12억 5,805만	9,047만
2100년 (C)	109억	2,954만	10억 6,499만	7,496만
C/A	137%	57.6%	74.0%	59.3%

출처 : UN, 2019년 세계인구 전망보고서 , 중위(Medium Variant)가정

늘어나면서 폭발 직전에 까지 이르고 있다. 지구의 적정 인구수가 20억 명 이라는데 앞으로 100억 명이 넘어간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 질 것이 뻔하다. 당연히 인구는 줄어들어야 한다. 문제는 출산의 비대칭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선진국들은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후진국들은 빠르게 증가 하고 있다.

동북아 3국의 인구감소 현상은 인류 전체로 보면 축복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구문제는 개별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천천히 변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구변화의 거대한 트렌드를 인위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경우 저출산·고령화의 속도가 남다르다. 감당하기 어려운 스피드다.

최근 인구 감소시대가 깊어지면서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플랜75'라는 영화가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 영화는 저출산·고령사회가 심화된 미래의 일본을 배경으로 소외된 노인문제와 세대갈등, 생명 보다 경제나 생산성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는 영화이다. 지난 2월 국내에도 개봉되었다.

"당신의 죽음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일본 정부가 국민들에게 초고령사회 특별대책으로 '플랜75'라는 시책을 발표한다. 75세가 되면 국가가 노인들에게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말이 권리이지 사실상 죽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일본판 고려장이다. 일본에서는 우바스테야마(노인유기)라고 한다. 이 영화는 제75회 칸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부문'에서 황금 카메라상을 받은 작품이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문제작이기도 하다. 일본 사회에 증오 범죄가 일어나면서 이 영화는 시작한다. 한 젊은 남성이 노인을 죽이고 나서 남긴 유서가 너무 섬뜩하다. "생산성 없는 노인들을 살처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언젠가는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 질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인구 문제에 대한 확고한 기준과 철학을 정립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생각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

필자가 생각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의 거대한 트렌드를 인정하고 받아 들여라.
2. 인구감소 후에 진행될 사태에 미리 대비하라.
   - 지방소멸, 생산인구·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해외자본유출, 세수감소 등
3. 50년 후 자연 감소를 기준으로 우리와 유사한 여건의 모델 국가를 찾아라.
   - 인구수, 인구밀도, 면적, 경제력, 부존자원 등을 감안

이러한 기준에 맞는 국가는 어디일까.

우리와 비슷한 조건을 갖추면서 닮고 싶은 나라이어야 한다. 필자는 세계 각국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의 국가를 찾아냈다.

바로 네덜란드이다. 네덜란드는 과거 17세기 세계 최강국이었다. 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경제를 선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양강국이 되었는지 우리는 이들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네덜란드의 인구는 우리나라의 1/3 수준이지만 무역규모는 우리 보다 크다. 1인당 GDP는 우리의 2배 수준인 6만 달러를 넘고 있다.

장래 한국경제 모델과의 비교 ('22기준)

	한국 (A)	네델란드 (B)	차이 (B/A)
인구	5,171만 명	1,772만 명	1/3 수준
인구밀도(㎢당)	518 명	520 명	비슷
출산율	0.78 명	1.64 명	2배 이상
면적	1,004만 ha	415만 ha	1/2 수준
명목GDP	1조 6,733억 달러	1조 732억 달러	2/3 수준
1인당 GDP	32,410 달러	61,301 달러	2배 수준
무역규모('21)	6위	4위	비슷
주요기업	삼성전자, 현대차 SK, LG전자 등	ASML, 프로서스, 에어버스,하이네켄 ING, 스텔란티스 등	

네덜란드의 글로벌 기업들 중에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인 ASML, 세계적인 투자그룹 프로서스, 비행기 제조회사 에어버스, 유수의 맥주기업 하이네켄, 자동차 회사 스텔란티스, 다국적 은행 ING, 다국적 음악기업 유니버셜 뮤직그룹 등이 있다. 반도체, 자동차, 비행기, 금융,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네덜란드는 출산율이 유럽에서 상위권에 드는 국가이다. 출산율이 높은 이유를 한 가지만 든다면 무엇보다도 개인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주 4일제 근무에 이틀은 재택근무를 한다. 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 간에 차별이 없다. 1996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임금수준, 보육,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동등하게 운영한다. 정규직의 시간제 근로자로의 전환이 보장된다. 일하는 여성이 양육 하는데 큰 부담이 없도록 사회가 뒷받침 하고 있는 것이다. 듣기만 해도 부러울 뿐이다.

한편 네덜란드는 2023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디지털 경쟁력 지수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있는 국가이다. 디지털 해외인재의 유치, 로봇교육, 빅데이터 활용 등에서 선두주자이며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2072년 인구가 3000만 명 대로 줄어든다. 이 인구를 유지 하면서 네덜란드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안보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 북한 인구가 현재 2600만 명이고 50년 후에는 28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보다는 인구가 많으면서 첨단 방위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안보측면에서 중요한 일이다.

최근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한목소리로 저출산 위기에 대해 공감을 하고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시책이 되기를 바란다. 미래 한국 경제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분명하다. 작지만 세계를 선도 할 수 있는 네덜란드 같은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을 때 작지만 강한 강소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플루언서 매칭 플랫폼과 디토 소비

조원경 UNIST 교수/글로벌산학협력 센터장



DITTO ECONOMY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공허가 겹쳐 보인 사회상은 지금만이 아니었다. 1920년대 미국도 이미 그러했다. 그런 분위기를 가장 잘 그린 걸작으로 손꼽히는 책이 F. 스콧 피츠제럴드(Francis Scott Key Fitzgerald)의 소설『위대한 개츠비』이다. 인간의 허영심을 표출하는 여주인공 데이지의 흐느끼는 한 구절을 읽어 본다.

"너무, 너무 아름다운 셔츠들이야. 너무 슬퍼. 한 번도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셔츠들은 본 적이 없거든."

자신에게 펼쳐진 값나가는 셔츠 더미에 얼굴을 파묻고 우는 그녀의 모습은 현대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이왕이면 유행하거나 명품 브랜드인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이들이 주위에 생각보다 많다. 그들은 마치 명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면 좋겠다고 거리낌없이 말하듯 우리 곁에 다가온다.

백화점 특설매장에 사람들이 몰려든다. 옷을 고르는 광경을 보다 왠지 나도 안 사면 못 버틸 것 같다는 감정이 들게 된 적이 있지 않나. 반대로 특정 브랜드나 디자인의 옷이 마음에 들어도 흔해 빠지면 왠지 구매욕이 사라지기도 한다. 인간의 마음은 이렇듯 상황에 따라 변덕이 죽 끓듯 한다. 다른 사람의 소비에 내 소비가 영향을 받는 것을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라고 한다. 이 이론은 1950년에 미국의 하비 라이벤스타인(Harvey Leibenstein)이 그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덩달아 사고 싶은 심정(밴드왜건 효과)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기 훨씬 전부터 우리 피에 오랫동안 흘렀다. 그중 사치재를 소비하고 싶은 욕망은 베블런 효과로 불렸다. 이는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과학자 소스타인 베블린(Thorstein Veblen)에게서 유래했다. 그는 저서 '유한 계급론'에서 상류계급의 두드러진 소비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자각 없이 행해진다며 '과시적 소비'를 저격했다.



>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에서 큰 유명세를 얻은 사람이나 유명인이 블로그, 영상, 사진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마케팅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의 겨냥에도 불구하고 명품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한정품 판매 상술이 제품 희소성 유지를 위해 요즘도 흔하게 펼쳐지고 있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같은 명품 브랜드는 세일을 하지 않기로 유명하다. 이월상품이 생기면 전량 폐기처분하는 '재고 없음' 전략을 펼친다. 가격 정책과 세일을 하지 않는 배짱 행위가 명품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살 테면 사라(신빙성 있는 위협)'란 과감한 마케팅 전략을 공공연하게 한다.

그래서였나! 1980년대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역시 상류층이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파노플리 효과'라고 분석했다. 파노플리(panoplie)는 프랑스어로 한 세트(set) 혹은 집합이라는 뜻이다. 본래 기사의 갑옷과 투구 한 세트를 가리키는 용어였다. 파노플리 효과는 사람들이 특정 제품을 구매하면서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의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같은 집단이거나 같은 부류라고 여기는 현상이다. 스타벅스와 같은 브랜드 커피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커피 맛이나 매장 분위기 못지않게 '이 커피를 마시는 다른 사람과 나는 같은 부류야'라고 느끼는 파노플리 효과가 중요하다. 현대 소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상품 자체보다는 상품이 지닌 이미지를 구매하고 이를 통해 만족을 얻으려 한다.

요즘 마케팅 시장의 큰손으로 인플루언서가 부각되고 있다.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에서 큰 유명세를 얻은 사람이나 유명인이 블로그, 영상, 사진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마케팅의 핵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고객들의 반응을 끌어낼 확률이 높다. 적절한 인플루언서를 내세워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듯한 파노폴리 효과를 노리는 것은 좋은 마케팅 전략이다.

같은 듯해도 좀 다른 뉘앙스의 디토 소비(Ditto Consumption)가 2024년의 화제로 떠올랐다. 좀 괜찮은 '나도 경제'(Ditto economy)의 소비 측면에서의 진화 판이다. 1990년 영화 '사랑과 영혼(Ghost)'에서 패트릭 스웨이지가 "사랑해"라고 하자 데미 무어는 "Ditto(나도)"라고 말한다. 이에 착안한 디토 소비는 특정 인물이나 콘텐츠 혹은 유통 채널을 추종해 제품을 구매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의미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신은 운동화 스케쳐스가 GS샵에서 엄청난 누적 매출을 달성한 것은 디토 소비의 인기를 증명한다. 디토 소비는 모방을 넘어선다. 사치를 즐길 것 같은 유명인의 운동화가 10만 원 이하인 것을 보고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생각하는 소비다. 다른 사람의 패션, 좋아하는 음식, 화장품이나 생필품을 모방하는 '손민수하기'를 넘어, 즉 주체적인 나를 당당히 지향한다. '남들과 다른 나'라기 보다는 '유명인과 함께 하고 싶은 나'의 욕망을 말하는데 다음 구절에서 그 정신을 훔쳐볼 수 있다.

"수많은 선택지가 생겨나고 과도한 정보가 돌아다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더 나은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란 포보(FOBO, Fear of Better Option)가 만연하다. 사람들은 이제 실패의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손쉬운 방편으로 디토 소비'를 선호한다. 모든 곳에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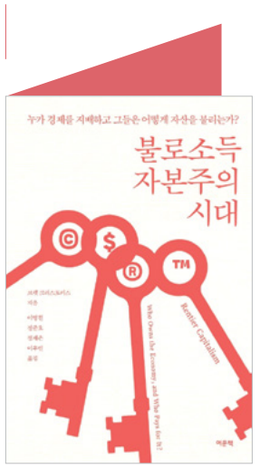
인플루언서 매칭 플랫폼이 봄바람 나듯 인기몰이를 하는 속에서 디토 소비의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다.



경제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재정·경제 도서 추천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시각을 책을 통해 배워보자.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



▲ 누가 경제를 지배하고 그들은 어떻게 자산을 불리는가?

브렛 크리스토퍼스(지은이) ● 여문책

책 속으로

민간 임대의 확장은 점증하는 불평등을 체화하고 있다. 즉, 토지와 토지 지대는 각각 불평등의 물리적 형태, 사회적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평등의 한 극단인 부유한 최상단은 과잉의 부를 토지 형태로 대량 보유하고 있고 거기서 창출되는 과잉의 소득을 누리고 있다.

불로소득 자본주의는 경제학자의 상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다. 불로소득주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강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것은 마르크스나 케인스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그리고 주류 경제학이 인정하는 것보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훨씬 더 중요한 현상이다.

이 책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는 불로소득주의가 이처럼 매우 확고한 현실을 보여준다. 나아가 현대 불로소득주의에 대한 역사적 기원을 추적해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일련의 정책개혁에 따라 그것이 어떻게 가속화되었는지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현대 자본주의에서 불로소득자 지배의 중요한 함의를 파악한다.

스웨덴 웁살라 대학교 사회경제지리학과 교수 브렛 크리스토퍼스는 학계에서 이미 그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꾸준한 연구 성과로 입지를 탄탄히 다진 인물이다. 크리스토퍼스는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에서 일찍이 '불로소득자의 안락사'를 주장한 케인스는 물론 마르크스도 주류 경제학도 모두 틀렸다고 지적한다. 그는 전통적으로 지대의 대명사와 같은 토지 외에도 금융, 자연자원, 지식재산IP, 플랫폼, 외주화 계약, 인프라 등 총 일곱 부문의 지대를 폭넓게 다루면서 우리 시대 자본주의의 본질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지난 세기와는 달리 환경문제까지 매우 심각해진 오늘날, 이대로 가다가는 자본주의가 종말을 맞을 것이기에 이 책은 현행 자본주의에 관한 의미 있는 처방전이라 할 만하다.

〈한국어판 서문〉에서부터 이 책의 핵심 개념이 '지대'라고 밝힌 크리스토퍼스는 비주류와 주류의 실제적 혼합으로 지대를 정의한다. 다시 말해 "경쟁이 제한적이거나 부재한 조건에서 희소자산의 소유 또는 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지대이며, 지대의 경제학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통제와 독점이기 때문에 현재 많은 나라에서 겪고 있는 불로소득주의의 폐해는 본질적으로 권력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CHATGPT로 하는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 굿바이 파이썬! 코딩 없이 말로만!

김성민(지은이) ● 서울경제경영

책 속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Data-driven Decision Making)은 비즈니스의 새 상식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기업, 팀, 실무자는 살아남는 게 기적이다. 과거에는 데이터 분석이 너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였지만, 이제는 ChatGPT를 위시한 초거대언어모델들 덕분에 정말 정말 쉬워졌으니, 이제부터라도 꼭 데이터를 자신만의 새 무기로 장착하고 큰 생산성 혁신을 이루어 주시길 부탁한다.

실무자들이 성장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강해지고, 그렇게 기업이 더 좋은 상품/서비스를 생산해 내면 결국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데이터 분석이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현대 비즈니스의 필수 전략이다.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데이터를 근거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나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항상 더 우수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문제는,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이다. 많은 기업이 파이썬 교육에 투자하고 있지만, 비전공자에게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하지만 이제 ChatGPT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ChatGPT는 단순히 데이터 분석에 그치지 않고, 비즈니스에 직접 적용 가능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ChatGPT로 하는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은 기업 임직원들에게 코딩 한 줄 못 해도 ChatGPT를 이용해 전문가 수준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는 책이다. 이직할 직원을 예측하는 인사데이터 분석, 팀별 생산성을 예측하는 생산데이터 분석, 미래 주문 수요를 예측하는 판매데이터 분석 등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임직원들의 데이터 역량을 끌어올려야 하는 기업 인재개발팀에게 특히 유용하다.

이 책 〈ChatGPT로 하는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은 ChatGPT를 통한 혁신적인 데이터 분석 방법을 소개한다. 이직할 직원을 예측하는 인사데이터부터 팀별 생산성, 미래 주문수요 예측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 임직원들의 데이터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김성민 저자는 인공지능 경영대학원을 표방하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AI 전략경영 석사 공동주임교수를 역임했고, 비개발자 비즈니스맨들이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AI CEO 과정(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자독서모임(산업정책연구원), LG전자, HD현대, 중앙그룹 등 다양한 기업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진행했다.

실제 비즈니스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이 책은, 데이터 분석 초보자도 ChatGPT를 이용하여 데이터 분석 과정을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해준다. 더 이상 복잡한 코딩에 매몰되지 않고,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다.

MARCH

2024

3

재정

•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각 중앙관서)

경제

• 한국은행 2023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 (잠정) 발표 (한국은행, 3.5.)

• 2023년 4/4분기 실질 국내총챙산은 전기대비 0.6%, 명목 국내총생산은 전기대비 1.6% 성장

• 2023년 실질 국내총챙산은 전년대비 1.4%, 명목 국내총생산은 전년대비 3.4% 성장

•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4,405.1만원으로 전년대비 3.7% 증가(미 달러화 기준 33,745달러)

농축수산물, 석유류, 서비스 등 물가 불안요인에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기획재정부, 2.22)

• 농축수산물은 2~3월에 300억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계속하면서 할당관세 물량 도입 등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에 착수하기로 함

• 석유류 가격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조치 및 경유·압축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

• 서비스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안정화 및 시장점검을 지속할 계획

1월

재정
• 2025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2023년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

경제
• 통계청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 국제통화기금(IMF)
수정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2월

재정
• 2023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 2023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경제
• 한국은행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속보)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
(Interim Economic Outlook)발표

3월

재정
•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각 중앙관서)

경제
• 한국은행 2023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
(잠정) 발표

4월

재정
• 2023년 결산 검사 의뢰
(기획재정부→감사원)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발표
•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5월

재정
• 2025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2023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 2023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 2023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경제
• 통계청 2024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발표
• 통계청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발표

6월

재정
•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 통계청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 OECD 경제전망보고서(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7월

재정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 발표
• 통계청 2024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수정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8월

재정
• 2025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경제
• 통계청 2024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경제전망 발표

9월

재정
• 2025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
(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0월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3/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속보)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 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발표
• 재정점검보고서
(Fiscal Monitor) 발표

11월

경제
• 통계청 2024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보고서(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2월

재정
• 2025년 예산 확정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FIS NEWS

한국재정정보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지정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은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운영실태 평가'는 국민·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는지, 그 데이터의 편리한 활용을 지원하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평가제도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며, 공공데이터의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감점) 등 5개 영역 16개 지표로 구성된다.한국재정정보원은 2020년부터 4년 연속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공공데이터의 활용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재정정보원 박용주 원장은 "데이터 기반 재정혁신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공유·결합·개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선도함과 동시에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월 8일(목) 오전 10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4조원이며,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5조원에서 이월액 3.9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7조원으로 확정되었다.
'23년 연간 경제성장률 1.4% 중 정부는 +0.4%p(한국은행 속보(1.25일) 기준)를 기여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을 통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정부기여율(29%)을 기록하였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을 반영하여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애독자 코너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간 <나라재정>을 즐겁게 읽으셨다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페이지의 간단한 느낌을 적어
애독자 퀴즈 정답과 함께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애독자 QUIZ

문제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국고보조금의 중복 부정수급 관리, 내역사업 관리 등 통합관리를 지원하며 신규사업 심사를 위한 근거정보 및 연장평가 정보가 저장되는 이 시스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답 | | | | | |

지난 호 정답 : **경제개발5개년계획**

지난 호 이벤트 당첨자

010-****-*107
010-****-*499
010-****-*272
010-****-*515
010-****-*574

애독자 퀴즈 정답 & 독자편지 보내주실 곳

★ 응모기간 2024.3.26.~2024.4.15.

QR 코드로 접속해
응모해 주세요.

한국재정정보원 공익캠페인



홈페이지 가기

2023년 모금금액 **8,305억**

2023년 지원금액 **7,446억**
연말에 모금액이 집중됨에 따라 일부 모금액은 다음해에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아동/청소년 1,719억 | 노인 1,010억 | 장애인 486억 | 여성/다문화 379억 | 위기가정 1,787억 | 지역사회 1,792억 | 해외/북한 273억

사업분야: 기초생계 3,882억 | 교육/자립 939억 | 주거/환경 615억 | 보건/의료 450억 | 심리/정서 382억 | 사회적 돌봄 강화 755억 | 소통/참여 확대 240억 | 문화격차 해소 183억

해당 지원내역은 2023년 사랑의열매 나눔기록입니다. 지난해 7,446억 원으로 전국 3만 개 기관과 함께 43만 명의 이웃을 지원했습니다.

본 광고는 한국재정정보원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랑의열매 무료 광고입니다.